

광주시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

농촌·준농촌 거주 2000명 대상...30일까지 신청

광주지역 여성 농민의 문화·여가활동 지원을 위해 '행복바우처' 사업이 추진된다.

광주시는 여성농업인의 문화·여가활동 접근성 강화를 위해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행복바우처'를 발급한다고 3일 밝혔다.

'행복바우처' 대상은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19세 이상 75세 미만 여성농업인이며 2000명에게 연간 10만원(자부담 2만원) 상당의 카드를 지급한다.

바우처카드는 영화관, 서점, 스포츠센터, 안경점 등 다양한 복지·문화분야에서 사용할 수 있다. 의료(병원·약국), 유흥, 사행업종 등에서는 사용이 불가능하다.

바우처카드 신청을 희망하는 여성농업인은 신분증과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를 지참해 오는 30일까지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김도기 기자

전남도, 우기 대비 하천재해복구 안전 강화

인명피해 등 취약지역 사전정비·집중관리 당부



전남도는 호우피해 하천재해 복구사업 현장에서 공사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우기대비 점검 및 공정보고회를 지난 2일 열어 취약지역 사전 정비 및 집중 관리를 당부했다.

보고회에서 현장별 우기 대비 점검과 조치계획 보고, 안전·품질관리 계획 및 시공 적정성 여부, 피해 재발 방지 대책 마련, 신속집행 달성 목표계획, 현안사항 등을 공유했다. 전남도는 17개 지방하천에 2085

억 원을 들여 호우피해 항구 복구 및 도민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교량 재가설, 제방 축조, 호안 정비, 기타 시설물 정비 등 하천재해복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선 또 중대재해 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확대 적용된 것과 관련, 현장별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안전계획 수립과 이행 조치 등 각별한 현장관리를 당부했다. /김 호 기자

동구 '올해의 책' 10권 최종 선정

30일 책정원서 선포식 개최... '책 읽는 동구' 본격화



동구는 책과 함께 소통하며 삶의 질을 높이는 인문도시 사업의 일환으로, '올해의 책' 선정과 함께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2024년 책 읽는 동구 '올해의 책'을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동구는 '올해의 책' 선정을 위해 교육청, 도서관, 독서단체, 작가협회 등 전문가로 구성된 12명의 도서 선정단과 함께 주민과 전문가들이 추천한 208권의 도서를 놓고 두 차례 회의를 거쳐 후보 도서 20권을 압축했다. 이어 구민 온라인 투표와 최종 심의를 거쳐 최종 10권을 선정했다. 유아 도서는 ▲ '노란 길을 지켜줘' (박선영) ▲ '강물과 나는' (나태

주 시·문도연 그림)이 어린이 도서 ▲ '그냥 씨의 동물 직업 상담소' (안미란) ▲ '리보와 앤' (어윤정)이 선정됐다.

청소년 도서는 ▲ '고요한 우연' (김수빈) ▲ '노 휴먼스 랜드' (김정) ▲ '소금 아이' (이희영)가 성인 도서는 ▲ '눈부신 안부' (백수린) ▲ '단 한 사람' (최진영) ▲ '플랫폼은 안전을 배담하지 않는다' (박정훈)가 최종 확정됐다.

동구는 30일 오후 2시 구립도서관 책정원에서 '올해의 책' 선포식을 개최하고 선정 도서는 작가 북토크, 독서공모전 등 책 읽는 동구 '올해의 책' 프로그램의 주제가 되도록 활용할 계획이다. /조선주 기자

광산구 아동친화도시 조성, 민관 힘 모은다

아동친화도시조성위원회 발족...첫 정기회의



광주 광산구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민관 협업 체계를 본격 가동했다.

광산구는 지난 2일 구청 2층 회의실에서 아동친화도시조성 위원회를 발족하고 첫 정기회의를 열었다.

광산구 아동친화도시조성위원회는 아동친화도시 조성 정책의 기본 방향 및 전략,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는 민관 협력 기구다. /이동기 기자

김기숙 광산구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경찰서, 교육지원청,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아동 관계기관, 아동 분야 전문가 등 총 13명으로 구성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신규위원회에 위촉장을 수여하고 시위원회 운영 활성화 방안 ▲광산구 아동친화도시 조성 사업에 관한 추진성과 및 추진계획 등에 대해 의견을 공유하는 등 활발한 논의가 이뤄졌다. /이동기 기자

전남대·조선대·기독병원 협업체계 구축 모색

'의정갈등 장기화 대비'...위독 중증환자 수술, 번갈아 맡는 방안 등 논의

의과대학 정원 증원 방침에 따른 전공의 집단 이탈이 7주째 이어지는 상황에서 광주 상급종합병원을 지키고 있는 전문의들의 피로 누적이 심각해지고 있다.

의정 갈등이 해소 기미 없이 장기화하면서, 생사가 오가는 응급 중증환자의 수술을 분담하는 병원 간 협력 체계 구축 등 궁여지책을 모색하고 있다.

3일 의료계에 따르면 광주지역 상급종합병원인 전남대병원과 조선대병원, 주요 2차 의료기관 광주기독병원과 광주시는 이날 오후 의정 갈등 장기화에 따른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핵심 논의 안건은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응급 중증 환자의 수술에 대해 해선 병원 3곳이 돌아가면서 전담하는 협업 체계 구축을 모색해보자는 것이다.

지역 내 응급 중증 환자 발생 시 미리 정해진 차례에 따라 병원 1곳이 수술·치료를 도맡으면 해당 날짜엔 다른 병원 2곳의 의료진은 휴식 여건을 조금이나마 보장하자는 취지다.

의료 공백 사태로 생명을 잃는 최악의 상황 만큼은 예방하고, 상시적이지 않은 의료 수요에 대기해야 하는 잔류 의료진의 피로도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정부의 의대 정원 방침에 반발한

전공의들이 지난 2월 20일 무더기 일선을 떠나면서 각 병원마다 전공의(교수)와 진료 지원 간호사(PA 중심)로 비상진료체계를 꾸렸지만 한계에 봉착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전문의·수련의(인턴) 총원도 크게 밀렸고, 최근엔 '최후의 보루'였던 의대 교수들마저 사직서 제출 또는 주 52시간 단축 근무 동참 등 움직임을 보이면서 병원마다 수술 연기·취소 사태가 이어지고 있다.

실제 전남대·조선대병원은 비응급환자 진료와 병동을 통제해 의료진을 재배치하고 PA간호사 업무 범위도 확대했다. 정부가 파견한 공중보건·군의관도 일선 진료과에

배치됐지만, 전공의·전임의 공백을 메우기는 여의치 않다.

'얕게 데 덮친 격'으로 전남대·조선대 의대 교수들도 조속한 사태 해결을 촉구하며 절반가량이 사직 의사를 밝힌 뒤 근무 단축 등을 검토하고 있다.

전공의 이탈 이후 폭증한 당직 근무로 인해 극심한 스트레스와 체력적 한계를 보이고 있는 전문의들도 상당수다.

이 때문에 병원 간 협업 체계 구축 등을 통해 의료진 인력이 시급하다는 인식에 공감대가 형성, 대책 회의가 열릴 것이라고 의료계는 전했다.

이날 회의에는 두 대학병원 부원장과 기독병원 진료부장, 광주시 공공의료 담당 공무원 등이 참석한다. /김도기 기자

공정위, 교복 입찰 가격 담합 의혹 조사...위반 사실 확인

가격 정해두고 낙찰 예정자·들러리 세운 정황

광주지역 대리점에 지난달 심사보고서 송부

공정거래위원회가 교복 입찰 과정에서 담합한 의혹을 받는 교복 대리점들을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3일 공정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해 말 비수도권 지역 교복 대리점에 조사를 보내 입찰 관련 자료

들을 확보했다. 공정위는 이들이 학교 교복 구매 입찰에 참여하기 전 미리 입찰 가격을 정해두고 낙찰 예정자와 들러리를 세웠다고 의심하고 있다.

특히 광주 지역 교복 대리점들에게

는 지난달 심사보고서를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심사보고서는 사건 심사 결과 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고 판단해 제재가 필요할 경우 심사 내용 및 조치 의견 등을 기술한 문서다. 앞서 공정위는 올해 주요업무 추진 계획을 통해 국민 부담을 조래하는 의식주 분야 중 육류·주류·교복 등에 대한 담합을 집중 점검하겠다고 계획을 밝혔다. /권영만 기자

광주·전남소방, 청명·한식·총선 기간 특별경계근무

광주소방공무원 등 2903명·장비 274대 동원 24시간 운용
전남소방, 대피체계·담뱃불 투기 단속 등 유관기관 협력

광주소방이 청명·한식과 22대 국회의원 선거에 대비해 특별경계근무를 실시한다.

광주시소방안전본부는 청명·한식 기간인 3~6일, 국회의원 선거인 9~11일 화재대응태세를 강화한다고 3일 밝혔다.

특별경계근무 기간 소방공무원, 의용소방대원 등 2903명과 장비 274대를 동원해 24시간 운용한다.

또 화재취약시설 예방순찰 강화, 소방차 진입로 확보, 다중이용시설 관계자 안전 관리 지도, 소방 장비 100% 가동 유지, 산불진화기 협조 체계 강화 등 신속한 현장대응태세를 확립한다.

국회의원 선거일인 10일에는 개표가 시작되는 오후 6시부터 종료까지 자치구별 개표소에 소방차를 배치해

긴급상황에 대비한다.

전남도는 대형산불 발생 위험이 높은 청명·한식을 맞아 대응 태세 점검을 위한 '산불방지 유관기관 협의회'를 열어 기관별 추진사항을 공유하고 협조 사항을 논의했다.

협의회는 지난 3월 25일 봄철 기상 전망에서 강풍특보가 다소 많은 편으로 예보됨에 따라 관계기관의 대비 태세를 긴급 점검하는 차원에서 추진됐다.청명·한식 기간에는 성묘객 등 입산객이 증가하고, 건조한 날씨가 속어 영농부산물과 쓰레기 소각 행위가 급증하면서 대형 산불 발생 위험성이 높다.

이에 전남도 산림자원과 및 사회재난과, 소방본부, 순천국립관리사, 순천경찰서, 한국전력공사순천지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관별 중점 추

진대책을 공유했다. 특히 산불 진화헬기와 특수진화대 등 진화자원 동원, 산불 인명피해 우려지역 주민 대피 체계 구축, 주택과 시설 보호, 차량운행 중 담뱃불 투기 단속 등 주요 협력 내용을 논의했다.

또한 전남도는 오는 30일까지를 산불방지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비상근무체계 강화와 산불 취약지 중심 예방활동에 총력 대응할 방침이다. 산불 감시인력 1천34명을 투입해, 불법 소각 취약 시간대(오전 10시~오후 8시)에 산림 연결지와 묘지 주변, 주요 등산로 등의 감시활동을 강화한다. 불법 소각 과태료 부과, 현수막 설치와 마을 방송을 확대해 도민 경각심도 높일 계획이다.

한편 지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최근 3년동안 청명과 한식 기간 발생한 인양화재는 하루평균 19.3건으로 4월 인양화재 평균 10.8건 보다 약 55.9%가 더 많이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조선주 기자

서구, 따뜻한 마을공동체 90개 선정 '눈에 띄네'...3억2천만원 지원

서구는 '따뜻한 서구 마을공동체 구축'을 위한 2024년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선정결과를 발표했다.

앞서 서구는 지난 2월 주민 설명회를 개최한 후 공모사업 접수와 함께 사업계획 작성법 등 교육·컨설팅을 마쳤다.

심사절차를 거쳐 최종 90개 단체에 보조금 3억2000여 만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공모사업은 ▲마을공동체(자유) ▲아파트공동체(자유) ▲기획공모 등 3개 부문으로 구성됐으며 서구는 주민모임 또는 단체에 각 200만~1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선정된 단체는 신규 공동체 비율이 49%로 주민자치의 다양성이 반영됐다. 특히 ▲대규모 원물촌 주변 환경 정비와 안심키가, 집수리 공구대여,

고독사 예방지원 등 마을관리사무소(상무1동, 금호2동) ▲나눔·돌봄·기부 등 천사들의 하모니(금호1동 등 4개동) ▲임진왜란 화재 박물관 생명의 나눔정신을 계승하는 시민 오솔리주(중앙동 등 5개동) ▲페트병 뚜껑을 활용한 마을 벽화사업(치평동 등 4개동) 등 이색·협력사업도 눈길을 끌었다.

/조선주 기자

북구 '주민참여예산 주민 제안사업' 발굴 개시...6월 21일까지

북구가 주민이 체감하는 편의 사업을 발굴해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고자 6월 21일까지 '주민참여예산제 주민 제안사업 공모'를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올해 주민 제안사업 공모는 기존 사업이 시설·환경 분야에 편중됐던 문제점을 보완하고 지역 특색을 반영한 다양한 사업 발굴을 목표로

총 20억 규모로 실시된다.

'구 정책사업 분야'는 사업당 1억 원 이하로 청소년, 청년, 사회적 약자 등 주민 편의 증진 사업 또는 문화·예술·안전 관련 활성화 시책 사업을 제안하면 되고 '지역 현안 사업 분야'는 주민 생활 불편을 해소하거나 마을 의제와 연계해 지역 특색을 살릴 수 있는 사업을 제안건

별 5000만 원 이하로 발굴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 주체는 북구 예산 편성과 집행에 관심이 있는 북구 생활권자이고 참여하고자 하는 주민은 제안사업 신청서를 북구청 누리집을 통해 제출하거나 북구청 기획조정실, 행정복지센터에 우편·방문으로 전달하면 된다. /이동기 기자

전남·전북교육청, 글로벌교육 확대에 힘 모아

전남교육청이 오는 8일 전북교육청과 정책협의회를 열어 글로벌교육을 통한 교육 경쟁력 강화 방안을 협의한다.

3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협의회는 우수 교육정책을 공유하는 한편 지역에서 세계로 향하는 글로벌 교육을 확대하기 위한 자리이다.

협의회에는 김대중 전남교육감과 서거석 전북교육감을 비롯해 양 기관 직원이 참석한다.

전남교육청은 글로벌교육의 핵심 정책인 2024 대한민국 글로벌 미래 교육박람회, 전남학생교육수당, 전남형 늘봄학교 등의 사업 추진 배경과 현황 등을 발표한다.

이어 전북교육청과 함께 정책 기획조정·정책관리·빅데이터분석·진로진학교육·디지털융합의융합교육·늘봄학교 운영 등 6개 분야별 협의회를 열어 지역 중심 교육을 펼쳐나갈 정책을 공유하고, 발전 방안을 모색한다.

전남교육청은 공생의 미래교육과 출생에서 정주까지 지원하는 전남형 교육자치를 논의의 중심에 두고, 여건이 비슷한 전북교육청과 연대해 지역소멸의 위기를 극복해 나갈 해안을 모을 예정이다.

'입원 치료 권유' 아나 흥기살해 60대, 징역 12년

알코올 의존증 입원 치료를 받으라는 요구에 격분, 배우자를 흥기로 살해한 60대 남성이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정영하 부장판사는 3일 201호 법정에서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A(63)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올해 1월 16일 오후 7시께 광주 북구 매곡동한 아파트단지 4층 가구 인근 계단에서 아내 B(58)씨를 흥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술에 취한 A씨는 일을 마치고 집에 들어온 아내 B씨가 '병원에서 알코올 중독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요구하자, 화기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뇌병변 장애 판정 후 직업 없이 술을 자주 마셨으며, 생계를 이어온 B씨와 자주 다툰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자신을 피해 현관 밖으로 달아나는 아내 B씨를 쫓아가 흥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순간의 분노를 참지 못하고 34년간 함께 결혼 생활을 한 배우자를 흥기로 여러 차례 찔러 죄질이 나쁘다. 자녀들도 큰 충격에 빠졌고 A씨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우발적 범행인 점 등을 고려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